

‘벌어진 北美’에 정의용 특사카드… 文의 운전대 작동할까

특사단 대표에 서훈·김상균 포함 회담일정·관계발전 등 합의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분수령이 될 9월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항구적 평화정착과 종전선언, 비핵화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며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소원해진 듯 한 북미 관계에서 어떤 중재노력을 다시 발휘지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우선 당장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측의 특별사절단 파견이 예정돼 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보낼 예정이다. 수석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는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5일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당일 오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달 13일 열린 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

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단은 5일 서행 직항로로 방북했다 당일 귀환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의 결과물에 따라 9월 예정된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북 특사는 잠시 멈춘 듯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를 좀더 빨리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상당하다. 특사 파견의 일차적 목표는 좀처럼 매

듭지지 못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8월에서 잠시 미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조만간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소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북 특사단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도 북측과 진전있는 대화를 통해 미뤄진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크

한반도 '운명의 9월' 주요 일정

9월5일 대북특사 방북 ·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 ·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적극적 태도 촉구	9월 북한 9·9절 · 정권 수립 70주년 · 경제 총력 노선에 대한 성과 여부가 관건	미상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 북미간 비핵화-종전선언에 대한 일정한 타협 가능성	중순 남북정상회담(3차) · 문 대통령 평양 방북 · 비핵화 의지를 바탕으로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논의 진전	9월18일~10월1일 유엔총회 · 27일 문 대통령 연설 · 29일 리용호 외무상 연설 · 종전선언 가능 여부가 관건. 불발 시 10일 이후 추진 예정
---	--	---	--	---

대북 특사단 5인 프로필

 정의용 (72)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 수석특사	 서훈 (64)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54) 통일부 차관	 김상균 (56) 국가정보원 제2차장	 윤건영 (49)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주요 경력 외무부 통상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장, 제17대 국회의원, 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대북전략국 단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가정보원 대북전략실장, 제3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국가정보원 대북전략부서 차장	대통령 정무2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정무기획 비서관

자료/청와대 연합뉴스

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 내기가 어렵다”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일정 등이 확정될 경우 여야 대표들과 동행할 뜻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도 큰 관심사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이 확정되고, 이보다 앞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총회 기간인 이달 27일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이를 뒤인 29일 북한 장관급 인사의 연설이 잡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달 예정 3차 남북회담 과제는 ‘北美 분위기 반전’

청와대, 5일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 부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중순에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전 없는 북미 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이 겹치면서, 한국이 재차 균형자 역할을 부각하며 대화 국면 유지나 분위기 반전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오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실익은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가 폭넓게 협의한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북미 협상 진전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유엔총회

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종전선언 역시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경색된 분위기를 뒤집는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이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

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측 요구 사항을 조율하며 뚜렷한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 4월 정상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도 비핵화 실천 계획(로드맵)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8월 평양에 갔

을 경우, 한국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회담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국이 동의할 만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정은 핵 목록 신고와 종전 선언 교환이든, 그보다 진전된 대략적인 실천 계획이든 뚜렷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무역 전쟁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구도가 복잡해졌고, 과거 6자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북미 간 합의가 있어야 3차 혹은 4차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달아온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북미 협상 난항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양국간 냉기가 흐르고 있지만, 남북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과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왔다.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발표될 남북 관계 발전 합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쟁점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상위 0.1% 근로소득 6.6억 하위 10%는 69만원 그쳐

심상정 의원, 소득 천분위자료 분석

지난 한 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69만원에 그쳐 소득 차이가 무려 100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000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매달 5500만원씩 벌어들이는 셈이다.

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093억원으로 전체 1774만98명이 신고한 근로소득 총액 439조9천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443만5025명의 총 근로소득(11조7257억원)과 거의 맞먹었다.

상위 1%의 근로소득 총액은 40조2505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8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고,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5일까지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34개국 소장·재판관 등 100명 참석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2일~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연다.

이번 국제회의는 34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대표단 10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환영 리셉션 다음날인 3일 이진성 헌재소장의 개회사와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세션은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인권과 헌법재판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등 4개 소주제별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범중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 선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 또, 최고위원으로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후보가 뽑혔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도부 선출 투·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손 신임 대표는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하태경 후보가 22.86%, 이준석 후보가 19.34%의 득

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권은희 후보는 6.85%로 4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또 김수민 후보가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돼 당연직 최고위원이 됐다.



/연합뉴스